VISION 9

가족행복 · 여성행복

여성이 행복한,
건강한 복지사회를 만들겠습니다.

행복공동체

31 맞춤형 · 예방형 · 통합형 보건복지, 실현하겠습니다.

'다함께 잘사는 나라 만들기 프로젝트'

- 빈곤탈출, 드림스타트, 꿈의 열차 프로젝트
- 출산과 보육 걱정 없는 환경기반 조성
- 어르신의 행복 찾아드리기 운동
- 장애인이 행복한 나라, 특별 보호연금제도 도입

32 국민의 건강, 성실히 보살피겠습니다.

'건강은 예방부터, 차별없는 의료복지'

- 질병고통 없는 건강안전망 구축
- 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의 질병관리 전환
- 응급 · 재난 의료체계 개선을 통한 국민생명 보호
- 식품 · 의약품 안전종합대책 마련
- 보건 · 의료 · 제약산업을 21세기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집중 육성

33 행복한 사회, 여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성 행복, 가족 행복'

- 일과 삶이 조화되는 맞춤형 여성 일자리 창출
- 양성평등 사회 실현
- 폭력으로부터 여성 보호

34 가족의 기쁨, 우리의 빛과 희망입니다.

'모든 가족의 가치를 소중히'

- 가족사랑문화 캠페인
-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의 권익 개선 종합대책
- 안전한 놀이터, 행복한 가족의 휴식공간

VISION 9

가족행복
·
여성행복

목표 31

맞춤형·예방형·통합형 보건복지, 실현하겠습니다.

'다함께 잘사는 나라 만들기 프로젝트'

빈곤탈출, 드림스타트, 꿈의 열차 프로젝트

2008년 현재 빈곤층(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자)은 전 국민의 8.7%인 416만 명에 달합니다. 빈곤층에 대한 문제 해결 없이는 사회 양극화와 계급간 갈등을 막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마저 저해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종합지원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을 점진적으로 늘리겠습니다.

- **드림스타트프로그램을 전개하겠습니다.** 저소득가정의 취학 전 아동에게 조기교육을 실시하고, 저소득가정의 아동에 대해 보육, 교육, 보건, 여가·문화 등 성장에 필요한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저소득가정 학생에 대한 교육복지 프로젝트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가난의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학생별 맞춤형 장학제도를 실시하는 등 교육에 대해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공무원 채용에 빈곤층에 대한 계층할당제(Affirmative Action)를 도입하겠습니다.** 우선 9급 및 기능직에 시범 적용하고 장기적으로 자치단체, 공공기관, 사기업으로 점진적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 **서민들을 대상으로 무담보 무보증 소액대출은행(Microcredit Bank) 설립을 지원하여 서민들의 창업을 돕고 고리사채 피해를 막겠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한정된 대상에 대한 일괄급여방식을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 전환하고, 저소득층에게 근로 인센티브 부여를 위해 근로장려금 제도를 강화하겠습니다. 급여의 특성에 따라 자산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차등화하겠습니다.

- **자활장려금의 확대 및 수급자에 대한 EITC(근로장려세제) 적용 등으로 빈곤층이 스스로 가난에서 벗어나도록 돕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을 위한 방과후 학교 확대 및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사이버 가정학습 수요자의 만족도를 제고하여 실질적인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FQ)09한 나라 본 책(292~317) 2008.3.29 5:23 AM 페이지296 western

출산과 보육 걱정 없는 환경기반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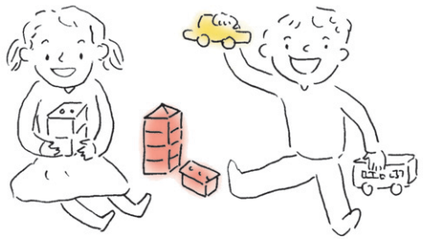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는 자녀 양육비 부담으로 이어져 중산층을 포함한 대다수 가정의 출산 기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 지원이 보육시설 및 유치원에만 국한되어 정부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가정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05년 1.09명에서 정부지원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으로 2007년 1.26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현재 추세로 인구가 감소하면 잠재성장률이 2000년 5%에서 2020년 3%, 2040년 1.5%대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출산과 양육에 적합한 환경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출산·양육의 사회적 책임 강화, 일과 가정이 양립 가능한 사회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 **국가의 보육·교육 체계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모든 영유아의 '임신–출산–보육–취학' 4단계에 걸쳐 '산전검사 불임치료–분만비용–예방접종–진료비–보육·교육비' 6개 항목을 국가에서 지원하겠습니다. 임신 전 과정의 산전검사 등 필수 의료 서비스 및 분만에 따른 의료비 지원과 이용비 지원을 점차 확대하겠습니다.

■ **육아의 보육비 부담을 줄여드리겠습니다.** 2012년까지 0세부터 5세까지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육시설 이용비 지원을 점차 확대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이용자의 경우에는 보육시설 이용금액의 상당액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시간제 보육제도를 활성화하여 보육시설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고 영·유아 필수예방 접종과 진료비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믿고 맡기기 편한 다양한 보육시설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장의 업그레이드 및 양질의 보육인력을 확보하여 보육유형을 다양화하고 보육의 서비스질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보육에 대한 범국민적, 범사적 참여를 유도하여 사회노년층의 봉사활동 및 재취업의 기회로 활용하겠습니다.



(FQ)09한 나라 본 책(292~317) 2008.3.29 5:23 AM 페이지298 western

어르신의 행복 찾아드리기 운동

소득증가 및 의료기술 발달로 인해 건강에 대한 삶의 욕구가 높아지면서 고령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는 경제적 궁핍, 건강악화, 사회적 고립 등의 문제를 안고 있어 노인에 대한 질병, 빈곤, 고독의 3대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인 노후소득 보장시스템 구축이 절실합니다. 2008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 인구의 10.2%에 이릅니다. 고령자의 비중이 인구 100명당 9.9명이나 2050년에는 38.2명이 되어 인구 3명당 1명이 만 65세 이상 고령인구를 부양해야 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초고령사회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이뤄져야 합니다.

■ **고령화사회대비 해 중·장기 노인복지종합대책안을 마련하기 위해 당내 특위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2008년 「노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 제·개정 후 2009년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 **고령화사회에 대비해 중·장기 종합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전환하고 지급 대상자도 65세 이상 노인의 80%로 확대하겠습니다. 현행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선정기준을 보완하고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에게는 교통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은 조세로 운영하는 기초연금과 자신이 낸 만큼 가져가는 비례연금으로 이원화하겠습니다.

■ **고령화사회에서의 노인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여가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고령자 적합직종 개발, 임금피크제 도입, 정년연장 등을 통해 고령자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고령자인력시장에 대한 관리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 **고령친화산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고령친화제품 기술개발을 위해 고령친화용품 개발 촉진을 위한 연구 확대 및 박람회개최 등을 지원하고 '노인전용아파트 동'을 건설하는 기업에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 및 지킴이 사업에 내실을 기하는 등 독거노인종합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습니다.

■ **노인장기요양 급여대상자를 치매 4등급까지 확대하겠습니다.** 틀니, 보청기,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관련 의료비는 최대한 국가가 지원하겠습니다.



(FQ)09한 나라 본 책(292~317) 2008.3.29 5:23 AM 페이지 300 western

장애인이 행복한 나라, 특별 보호연금제도 도입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52.1%(157만원)에 불과하고 비장애인의 최저생계비 미만 비율이 8.9%인 데 비하여 장애인 가구는 19.4%로 높은 빈곤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66.3%가 국민연금에 미가입되어 있으며 중증장애인의 경우 실업률이 60%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에 대한 근본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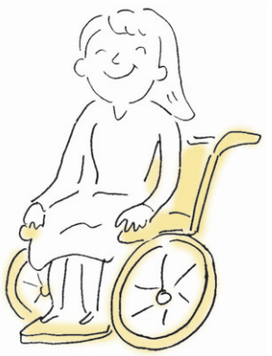
■ 장애가 장애되지 않는 사회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장애예방 및 재활치료를 위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중증장애인에게 기초장애연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장애아동특별보호연금제도 및 후견인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장애아동 부모들이 장애아동을 위해 장애아동특별보호연금에 가입시 국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하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적용 대상에 장애인을 포함시키겠습니다. 시설재가에서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65세 미만 장애인도 대상에 포함시키겠습니다.

■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이동권을 강화하겠습니다. 지하철 편의시설, 저상버스, 장애인 전용 콜택시를 대폭 확대하여 이동권을 안전하게 도와 드리겠습니다.

■ 활동보조인의 서비스를 제도화하여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지원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생활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중·장기 종합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VISION 9

가족행복 · 여성행복

목표 32

국민의 건강, 성실히 보살피겠습니다.

'건강은 예방부터, 차별없는 의료복지'

질병고통 없는 건강안전망 구축

현재의 건강보험은 낮은 보장성으로 인하여 암 등 중증질환에 노출되었을 때 가계 파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의 경우 OECD 평균은 72.8%('04년)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61.8%('05년)에 불과하여 건강보험료 체납자, 만성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외국인 근로자 등은 현행 의료제도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 **소외와 차별 없는 건강보장 환경을 마련하여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겠습니다.** 건강 소외계층에 대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건강복지 포털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건강 취약계층에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겠습니다. 소외계층별 건강 불평등과 차별 원인을 조사하여, 보건·의료·복지서비스가 연계통합된 건강복지 포털서비스 공급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확대하여 본인 부담금을 경감시키겠습니다.** 건강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여 기름 유출 사고 등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필수 의료 서비스의 공공 책임성을 강화하고, 의료급여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공공 개발사업에서 건강영향평가제도의 법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 **건강증진센터로 보건소 기능을 재편하고, 사회복지사의 소외계층 보호 기능, 역할 강화 및 처우 개선을 통해 관리의 내실화를 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FQ)09한 나라 본 책(292~317) 2008.3.29 5:23 AM 페이지304 western

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의 질병관리 전환

만성질환 증가, 고령화 가속화 등에 따라 치료 중심의 의료체계보다 질병 예방과 건강 확보 등 예방적 건강정책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생애주기에 따라 건강 관련 요소가 변화하므로 생애주기별 건강관리가 필요하며 국가 성장동력 확충 차원에서도 건강한 인적자원 확보는 필수적입니다.

■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병에 대한 개인의 자발적 예방 조치에 대해 건강포인트를 부여하고 보험료 경감, 바우처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의료기관에서 금연클리닉, 비만교실 등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 개혁을 하겠습니다.

■ 생애주기별 국민보건교육시스템 확립과 보건교육 및 건강증진 홍보를 강화하여 질병을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또한 5대 사망 질환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응급의료체계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응급·재난 의료체계 개선을 통한 국민생명 보호

적절한 응급조치만 받았으면 살아날 수 있는 응급환자의 사망률을 나타내는 '예방가능 사망률'은 2007년 34.7%에 달합니다. 따라서 선진화된 응급의료체계의 구축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사회안전망 확립의 기본입니다.

■ 응급·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선진 응급·재난 대응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하겠습니다. 응급의학 전공 정원의 단계적 확대 및 정원 충족률 제고를 위한 지원 방안, 대형·중소병원간 응급의료체계의 연계를 통한 체계적인 환자이송체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119 응급 및 재난 구조사 전문인력을 충원·양성하겠습니다. 주요 응급질환에 대한 증상 및 발생시 행동 요령과 심폐소생술, 응급구조법 등 응급의료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자동제세동기(AED), 심폐소생에 필요한 장비 등 다중이용시설에 구급의료용품 구비를 강화하겠습니다.

■ 응급의료정보센터(1339)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정보센터를 각종 응급의료 정보제공의 중추 기관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1399 전화번호를 복지부와 통합 복지 콜센터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첨단산업의 응급·재난 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송 중 환자 전달 시스템을 전국 규모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응급·재난의료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헬기, 응급구조용 오토바

(FQ)09한 나라 본 책(292~317) 2008.3.29 5:23 AM 페이지306 western

이(퀵119) 등 다양한 형태의 구급의료 이동수단을 개발 및 확보하겠습니다.

■ **16개 시·도 권역별 응급의료센터에 필수 응급의학 전공의를 확보하고 응급의료 수가를 현실화하겠습니다.** 권역별 전문 Trauma Center의 운영으로 사고 후 1시간 내에 수술을 받을 수 있는 획기적인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종합대책 마련

건강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높아지면서 유해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허위·과대과장 광고 등으로 인한 폐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 외식·집단급식·수입식품 소비·식품 관련 국제무역이 증가하고 식품가공기술이 발전하면서 식품안전의 위험 요소가 다양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식품유통체계가 다양화되면서 집단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및 불량식품 제조·판매가 급증함에 따라 국민의 먹거리 불안요인이 위험 수위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각종 식품·의약품, 기능식품 등의 제조 판매 기준 강화 및 체계적인 종합계획의 수립이 필요합니다.

■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식품안전기준과 규격을 표준화하고,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겠습니다.

■ **수입식품,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부정·유해식품 등의 국내 유입기준을 강화하겠습니다.** 소비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표시 정보 확대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및 부작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 **식중독 등 각종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급식 및 집단급식의 안전·위생기준을 강화하겠습니다.** 식당 학교급식 등에서도 식육, 김치, 쌀, 어류 등의 원산지표시제도를 강화하겠습니다.

■ **불량식품 제조·판매행위자 처벌기준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어린이들을 유해식품으로부터 보호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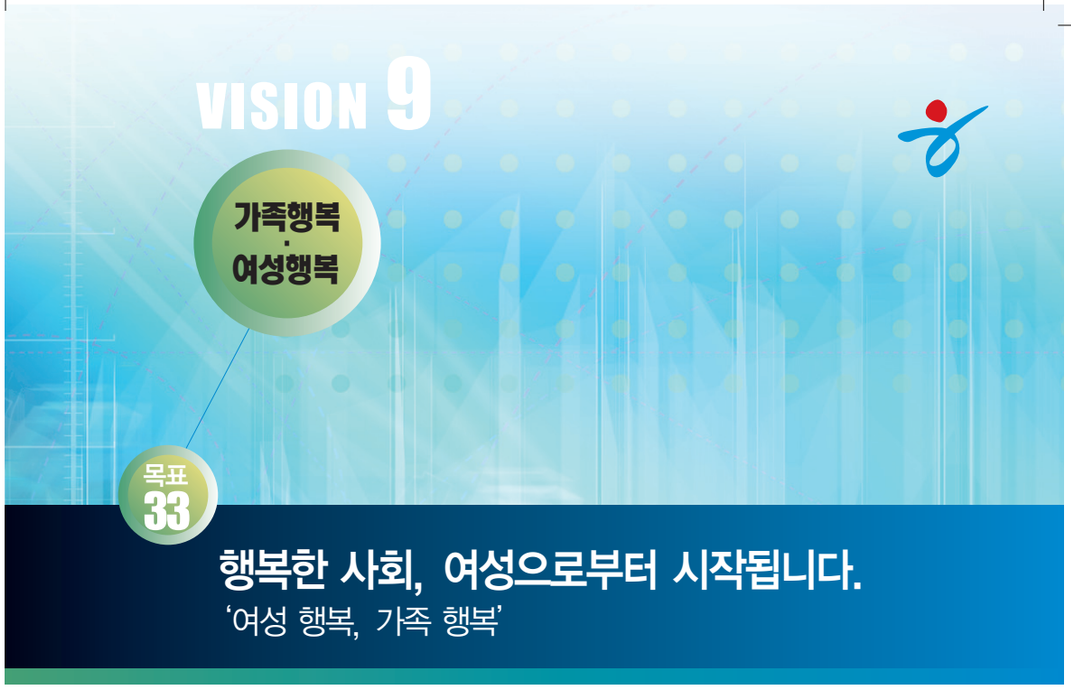
보건 · 의료 · 제약산업을 21세기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집중 육성

우리나라 보건 · 의료 · 제약산업 시장은 약 78조 원('05년 기준)으로 세계시장의 1.2%에 불과합니다. 보건의료기술과 IBNT 기술을 접목함으로써 의료산업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여 일자리 및 국부 창출에 기여해야 합니다.

■ 보건 · 의료 · 제약 · 한방산업을 융합산업으로 성장 · 발전시키겠습니다. 융합산업의 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고도의 접착기술을 이용한 미래 융합의료서비스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바이오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바이오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과 바이오산업 육성의 조화로운 연결고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주요 질환 및 희귀난치성 질환 극복을 위한 치료기술의 경쟁력 확보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의약품 관련 규정 국제화, 의약품 임상시험 지원 강화로 신약개발사업 등 성장 가능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신약개발을 위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해외환자를 국내 의료기관에 유치하며,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을 지원하여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한국의료포털사이트 운영 등 의료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 등 지원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의료서비스산업 육성과 한의약 정책을 위해 정부 조직을 강화 · 재편하겠습니다.



일과 삶이 조화되는 맞춤형 여성 일자리 창출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일자리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결혼 · 자녀 양육 등으로 인한 여성의 취업 단절 및 경제활동을 포기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학력 · 육아 상태 등 특성을 고려한 유망직종 발굴, 맞춤형 교육 · 훈련, 취업 연계, 사후관리 등 고용 관련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가칭)을 제정해야 합니다.

■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다시 일하기 센터' 선정 및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이에 '다시 일하기 센터'와 연계하여 경력 단절 여성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여성회관,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을 활용하여 지정 · 운영하겠습니다.

(FQ)09한 나라 본 책(292~317) 2008.3.29 5:23 AM 페이지 310 western

■ 고학력 청년여성의 커리어개발 및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여대생커리어센터'의 서비스 대상 및 기능 확대·개편을 통해 지역의 고학력 여성경력개발센터의 거점 기관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타교생, 졸업생, 고학력 전문여성을 대상으로 새로운 직종 발굴 등 맞춤형 직업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지역 대학과 연계한 '지역사회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및 '전문 직종 교육훈련 사업'을 통한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하겠습니다.

■ 지역단위 고용, 훈련 연계를 위한 '지역여성인력개발' 협력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지자체, 대학, 기업체, '다일센터' 등 교육훈련기관 등으로 구성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여성취업지원 전략 수립 및 취업 연계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양성평등사회 실현

남녀가 공존하는 실질적인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해 국제사회의 흐름과 수준에 맞는 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정책 형성 및 수립·집행의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여 성평등 관점을 반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 공공부문의 여성 대표성을 확대하겠습니다. 공직선거에 여성 후보자 공천을 적극 확대하겠습니다. 정부 행정부처 내 여성 고위직 임명을 확대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여성임원 임용목표제 5개년 계획' 마련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여성 채용을 확대하겠습니다.

■ 성인지 통계 생산 및 활성화, 성인지 예산제로 확대, 성별영향 평가를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폭력으로부터 여성 보호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방지 관련 법제도 시행에 따른 여성인권 보호조치 강화에 맞추어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인 자립·자활 지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이에 여성폭력 피해여성 지원 시스템과 사법 시스템의 유기적인 연계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 **범정부적 여성폭력방지 대책 마련 및 추진 점검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중앙·지역단위에서 여성폭력방지정책 평가와 예산 지원을 연계하겠습니다. 또한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운영 내실화 및 신·변종 성매매업소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하여 성매매 실태조사 및 지자체의 성매매방지정책 이행을 평가하겠습니다.

■ **피해여성 자립·자활 지원 시스템을 체계화하겠습니다.** '아동성폭력전담센터', '여성폭력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자활에 필요한 주거 및 경과적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고 대상별 맞춤형 사례 관리 및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실시하며 성매매 피해자 통합지원을 위한 '여성자활종합센터'(가칭)를 시범 운영하겠습니다.

VISION 9

가족행복 · 여성행복

목표 34

가족의 기쁨, 우리의 빛과 희망입니다.

'모든 가족의 가치를 소중히'

가족사랑문화 캠페인

가족의 가치는 시대가 지날수록 더욱 빛을 발하는 고유의 전통적인 가치입니다.

사회 분화와 함께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있습니다. 국가와 사회의 기본 구성단위인 가족의 행복과 기쁨 없이는 밝은 사회, 건강한 사회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가족사랑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문화 정착을 위해 국가가 직접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 **가족사랑 성공사랑 프로젝트를 개발하여 지역사회의 가족친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양한 특성의 가족을 위한 안전망을 구축하여 건강한 가정이 되도록 사회적 지원을 하겠습니다.

(FQ)09한 나라 본 책(292~317) 2008.3.29 5:23 AM 페이지 314 western

■ 가족간호휴가제도를 도입하여 장기적인 간호가 필요한 가족구성원을 위한 간호휴가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 부모가 이혼한 자녀의 경우 양육 및 교육에 있어 사회적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이혼하는 가정이 점차 늘어나면서, 한 부모와 사는 자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 가족은 경제적으로는 물론 교육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차별적 대우를 받기가 쉽습니다.

■ 부모가 이혼한 가정의 경우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측이 양육하는 측에 양육비를 지원하는 의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자보호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등에 대한 주거시설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의 권익 개선 종합대책

국제결혼이 크게 늘어나면서, 다문화가족이 급증하고 이들 대부분이 언어·문화갈등 등으로 한국에서의 가족생활 및 사회 적응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문화·글로벌 사회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국내에 정착한 이주여성들의 사회적응 및 자녀 양육 같은 다양한 지원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 이주여성 종합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결혼 전 이주여성들에게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정보를 제공하고 사전 상담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입국 전에 국제결혼이민관을 파견토록 하겠습니다. 이주여성이 입국한 이후에는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의 확대 설치를 통해 국내생활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생활정보의 제공, 이주여성 정착 성공사례에 관한 다국어판의 책자 제공, 한글교육·아동교육을 위한 방문교육사업의 추진, 방문교육 대상 가정의 선정 및 방문 서비스 제공, 이주여성을 위한 통·번역 서비스 제공, 사회연계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겠습니다.

■ 범정부 차원의 '결혼이민자가족 사회통합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다문화가족지원법」을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FQ)09한 나라 본 책(292~317) 2008.3.29 5:23 AM 페이지316 western

안전한 놀이터, 행복한 가족의 휴식공간

놀이터(놀이시설)는 설치 장소에 따라 국토해양부 등 4개 부처(5개 법령)에서 설치 및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설치 장소도 공동주택,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공원, 음식점 등 다양하여 안전관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놀이터에서의 어린이 안전사고·납치·유괴, 청소년 비행 등 시설안전관리 및 범죄 예방조치가 필요하며 놀이터 위생상태 관리 및 시설 개보수, 공간구조 개선 등이 시급합니다. 문화공간으로도 활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등 관련 법률에 대한 개정도 필요합니다.

■ **어린이 안전 모니터링을 위한 CCTV 설치를 지원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및 어린이공원(동네놀이터)에 범죄예방 CCTV를 서민층 지역에 우선 설치하겠습니다.

■ **놀이터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에 놀이터 모래에 대한 위생소독 실시, 놀이기구, 부대시설 등 모든 놀이터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 및 아파트단지, 동네놀이터 등 노후한 놀이시설 개보수 비용 지원, 사고대비 비상 시스템, 놀이터 주변 실태, 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등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